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중요한 것은 Status Quo 아닌 Future입니다.”

(현상유지) (미래)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가 없습니다.”

역대정부는 경제철학과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간 경쟁의 시대,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정책대안 마련은 부족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경제계도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 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식으로
한계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의 시행착오와 이해관계의 한계를 극복할 때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짚어 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경기회복 (2)산업의 미래 (3)고용노동 (4)기업의 사회공공성 역할 강화 등
4가지 당면 현안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바꾸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낼 실천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 각층이 합심 노력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1. 체감경기와 경기 하방리스크



현장의 목소리

“한국경제의 완전한 봄을 기다립니다”

“거침없는 반도체 질주로 생산설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4년 전 포기했던 코스닥 입성에도 성공했어요. 사람도 더 뽑아야 해요.”

_반도체 부품업체

“올해 성장률 전망 3.2%라는 IMF발 깜짝뉴스 나왔잖아요.
더 많은 수출 목표치 세워봅니다.”

_수출업체

“상장사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라던데, 우리는 왜 이렇죠?” _A 상장기업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북핵 때문에 해외바이어들은 장기계약을 안하려 해요.
저출산으로 아동복은 접은 지 오래입니다.
미래소재라는 탄소섬유를 보고 있는데 규정이 없거나 애매합니다.”

_중소 섬유업체

“통상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중관계 개선에 합의했으니 관광객 많이 들어오겠죠?” _관광업체

“저희는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켜보는 중입니다.”

_수출업체

“반덤핑 조사한다며 자료요구 받았는데 ‘자료폭탄’ 수준이라
몇 개는 못 냈어요. 그랬더니 협조 거부로 ‘관세폭탄’을 맞았습니다.”

_미국 현지공장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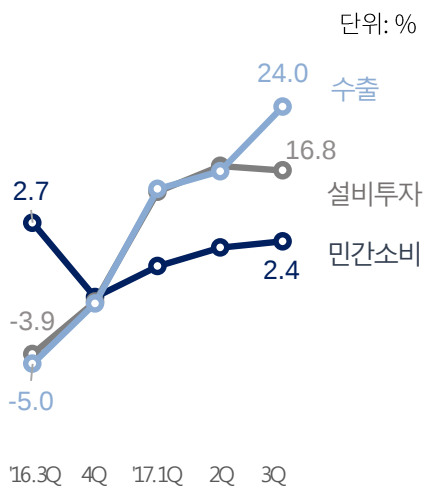
세계경기 회복의 온기가 한국경제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투자도 올들어 두자리수 증가세입니다.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사 영업실적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2분기에 17% 늘었고, 3분기는 45%로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10대 그룹 편중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84% 늘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한 상장사는 2%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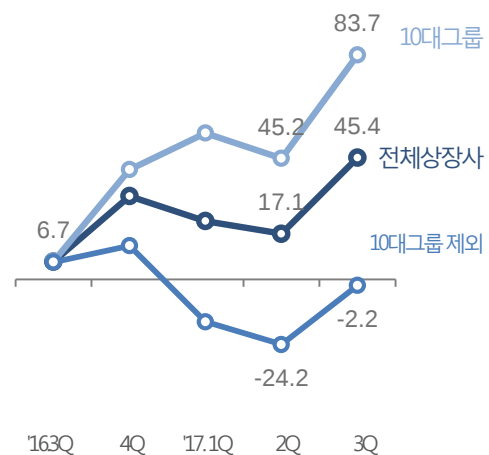
기업경기전망지수는 3년 3개월째 기준치(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기업실적(영업이익) 편중화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불확실성은 현재진행형

얼마 전 ‘한중 관계개선 합의’가 결정되면서 기업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은 이어지고
북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00조원의 가계부채, 미진한 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급속한 저출산, 달라진 노동환경 등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모처럼만의 경기호풍을 밀어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대
내
리
스
크

- 가계부채 ▶ 가처분 소득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 할 빚은 180만원 수준
- 구조조정 ▶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6년간 30% 늘어나
- 저출산 ▶ 저출산 대비 안하면 10년 뒤 경제성장률 0%
- 노동환경 ▶ 최저임금,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대
외
리
스
크

- 보호주의 ▶ 한국겨냥 수입규제는 5년 전 대비 122건 늘어나(10월말 기준 191건)
- 중국통상 ▶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무역애로 상담건수 3년 만에 40% 급증
- 미국통상 ▶ 세탁기·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추진, 한미 FTA 개정



전문가 진단

“편중화는 장기·구조적 문제… 연명책보다 역량강화책 해법”

“편중화 문제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립구도로 접근하기 어렵고, 과거 수출주도 성장 정책기조 유지, 국제경쟁 심화, 기술혁신 격차 지속, 수직적 분업구조 지속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과 연관돼 있습니다.”

—정혁 서울대 교수

“수출이 좋아져도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나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합니다. 이것이 편중화 원인이자 중소기업의 역량개발 의지를 꺾는 주 요인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역대정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노무현정부), 동반성장(이명박정부), 경제민주화(박근혜정부) 등 역대 정권의 양극화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만 국한되고 ‘역량강화’ 정책은 없었습니다.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연명책은 아니었을까요?”

—신관호 고려대 교수

“3% 달성 위한 ‘하방리스크 대비책’ 마련돼야”

“3%대 성장 나오려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안전판도 만들어야죠. 최악의 상황 가정한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

“5년 후가 더 걱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데, 금융·노동·인적자원 개발관련 제도는 구태에 머물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충격에 대한 대응책은 미진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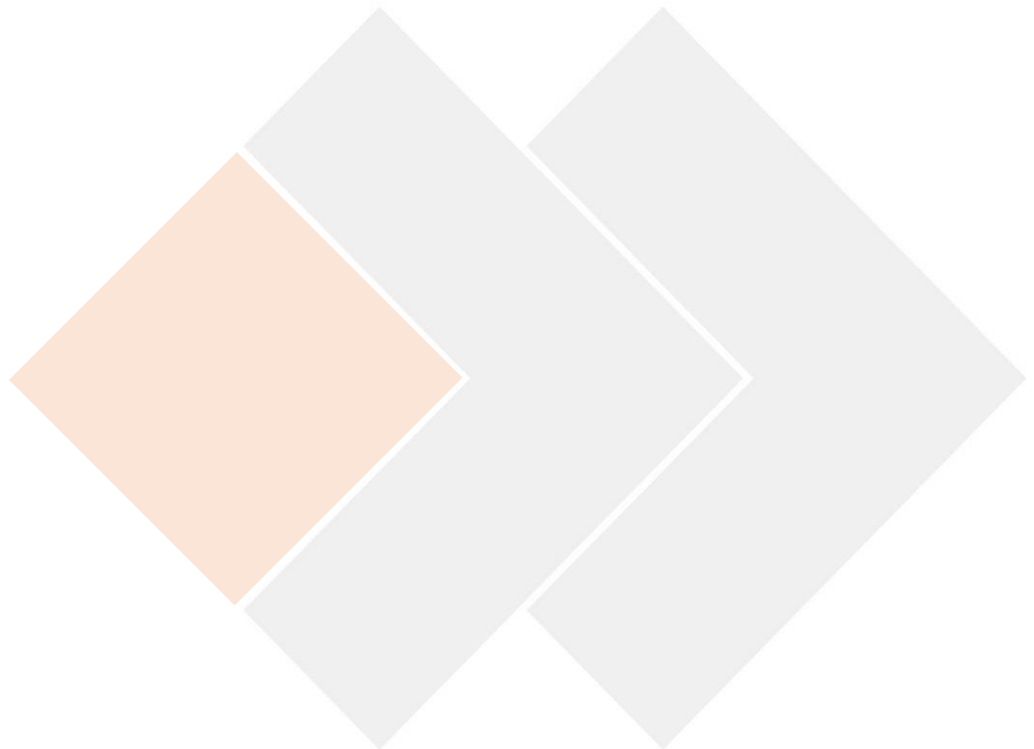
—정혁 서울대 교수

“통상마찰은 통관, 법률, 회계, 저작권 등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복합이슈입니다. 법무처 협업시스템 구축, 기업의 품질개선 및 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



2. 국가간 경쟁시대, 산업의 미래는?





현장의 목소리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는 역량강화에 투자중인가요?”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유 못하게 해요. GPS 활용은 꿈도 못 꾸죠. 공공재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원유를 못 캐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_컨설팅 업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는데, 당장의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특허를 빌려오는 식이죠. 장기적인 핵심기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10년 후 일본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_IT업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수없이 나와 기대 높인데 현실은 제자리인 듯.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잘 협업해야 할텐데요.”

_IT업체

“‘산업혁명의 주역’ 벤처기업의 Next round는?”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창업하는데 4일밖에 안 걸려요. 다만, 우리기술을 제 값 주고 사 줄 곳이 없고 전국 유통망도 부족해요.”

_벤처기업

“우수인력이 창업하지 않는 문화예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회생 및 파산절차 서류가 30종에 채권자 이의제기 없어도 처리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려요.”

_벤처기업

“우린 굴뚝산업에만 너무 매달린 건 아닐까요?”

“한국은 서비스산업하기 좋은 곳이에요. 의술 뛰어나고 교육열 뛰어나죠. ‘의료·교육 아시아 허브’로 자리잡기 딱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 아직 못 먹고 있어요.”

_외투기업

“서비스산업 발전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료나 교육은 절대 안돼요. 불평등 심화돼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_시민단체



현실은?

지금 전 세계는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젊은 IT 기업의 등장으로 미국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나이는 지난 10년간 14살 더 젊어졌습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에 정체된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나이는 지난 10년간 15살 더 나이 들었습니다.

맥킨지는 혁신을 막아선 ‘규제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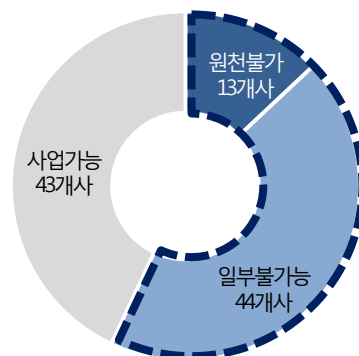
“세계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절반이상이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진입규제는 65개국중 49위)

국가별 진입규제(낮은순)

총 65개국

1 위		네덜란드
6 위		독 일
8 위		영 국
15 위		미 국
22 위		중 국
24 위		프 랑 스
40 위		터 키
49 위		한 국
62 위		러 시 아

글로벌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사업한다면?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자료: 맥킨지·아산나눔재단

Start-up이 Scale-up 하려면?

페이스북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년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이 탄생하는 미국의 비결은 ‘모험자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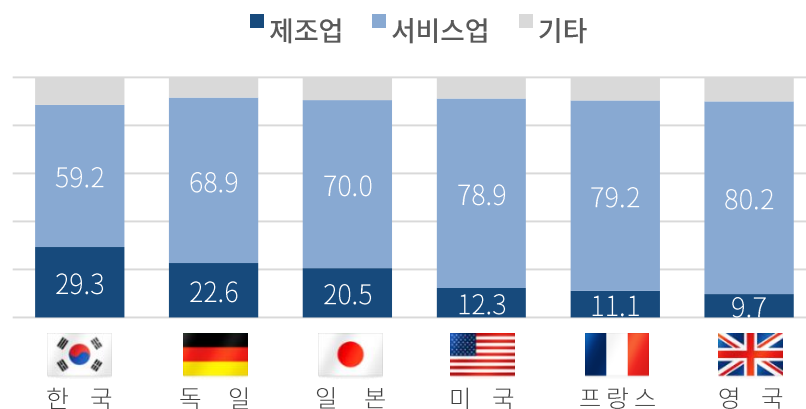
한국 스타트업의 61%는 창업 3년 내 중도 탈락한다고 합니다.
상장은 13년이 걸리고, M&A 출구는 1.3% 바늘구멍으로 투자회수가 어려워
민간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찾기
어려워 다음 라운드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新성장기회, 서비스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부가가치의 70~80%를 서비스에서 만드는데,
한국은 10년간 60% 내외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력도 제조업의 2배이지만,
대부분 자격증과 기득권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 산업별 비중



자료: World Bank



전문가 진단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혁신이 수용가능한 개방형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만 하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말이죠. 진입장벽이 사라진 기존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필요합니다.”

_컨설팅 업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자는 데 진보·보수 모두 동의할걸요?

다만,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사후처벌을 더 강화시켜야죠.

분식회계범에게 25년 징역 때리는게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_시민단체

역대정책

“규제기요틴(김대중정부), 규제총량제(노무현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박근혜 정부) 등 오랫동안 국정 주요과제로 규제개혁이 추진됐지만,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_신관호 고려대 교수

“자수성가 기업이 많아지고, 성장사다리도 견고해져야”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듯 합니다.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 바뀌어야 해요.”

“재도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은 첫번째 필요조건입니다.”

_컨설팅 업체

“창업 및 도전 → 성공 후 자금 조기회수 → 벤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민간중심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신규자금의 40%가량이 정책자금에 의존한 정부주도 시장입니다.”

_컨설팅 업체

“서비스 진입장벽 파격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는 2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① ‘서비스=공공재’로 제값받기 어렵다 ② 기득권으로 점철된 높은 진입장벽”

_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역대정책

“그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표방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자유로운 진입은 여전히 어렵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_정혁 서울대 교수



3.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현장의 목소리

“저임근로자 배려해야죠. 고임근로자 편승은 맞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취지이고 필요하죠.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면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직원 일부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_남동공단 기업

“저임금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연봉 4천만원 직원까지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건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려 해도 노조의 반대로 못하고 있어요.” _대기업

“경쟁이 심화돼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낙오자 받아줄 사회안전망은요?” _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지나치지 않은지?”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는 급여나 근무여건이 비교되죠.
내년쯤 퇴사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고민중입니다.”
_중소기업 2년차 직원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두 달째 못 뽑고 있어요.
월급을 올려주고 퇴근시간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60대와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_뿌리기업

“비정규직 꼬리표 땔 희망 생겨”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계약연장 못 할까봐 휴가도 제대로 못 갔는데,
정규직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요.” _정규직 전환대상자

“대기업·공기업 입사를 위해 대학생활도 포기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의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채용문이 좁아질 테니까요.” _취업준비생



현실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노동시장 지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6시간 길고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7%로 OECD 평균인 16.8%보다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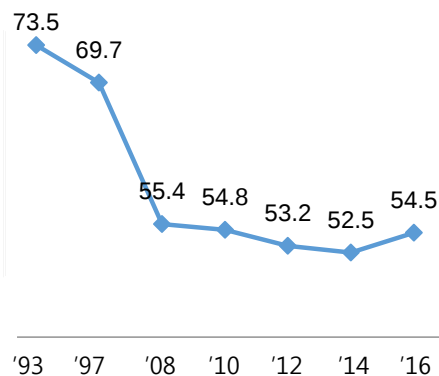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1%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정도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확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0년대 중반까지 70%대였으나 지난해 55%까지 떨어졌습니다.
2004년만 해도 정규직 임금이 100일때 비정규직은 65를 받았지만
지금 비정규직은 54 밖에 받지 못합니다.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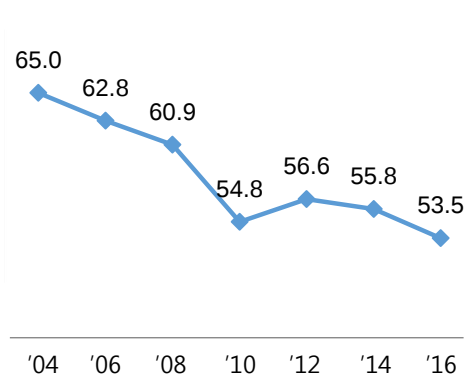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면



자료: 고용부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자료: 통계청

한쪽은 ‘일자리 없다’, 다른쪽은 ‘일할 사람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합니다(10월 청년 체감실업률 21.7%).
이들은 공무원, 공기업·대기업 직원이 되기 위해 수백대 일의 경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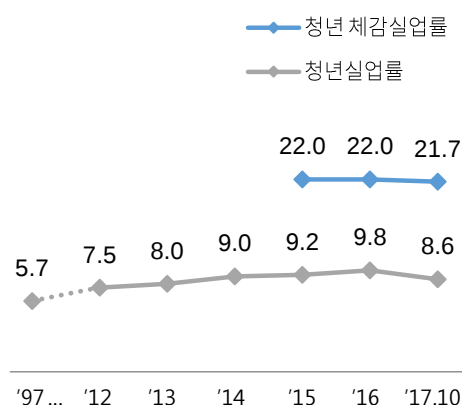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상반기 중소기업 미충원율 12.6%).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구하기 어려워
‘경쟁력 약화 → 지불여력 저하 → 임금수준 열세 → 구인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따라가기 힘든 중소기업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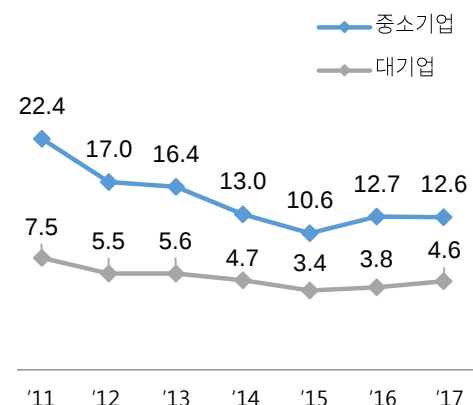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98.5%,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의 85.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청년실업률추이



자료: 통계청

기업규모별미충원율



자료: 고용부



전문가 진단

“역대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섰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_OECD

“세계 최고의 임금체불, 산재사망률, 비정규직 규모, 장시간 근로시간 등... 기업의 경쟁력이 구성원의 희생 위에 유지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어렵다’는 기업의 하소연에 얼매였습니다.”

_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박사

역대정책 “역대정부 모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추구했지만, 고용불안 계층의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하지 못했습니다.” _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개혁 시급”

“선진국 노동개혁은 유연성이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강화가 경직성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우린 노동개혁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_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의존하는 현 상태 유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 걷어내 기업이 혁신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_조성재 노동연구원 박사

“경직적 노동시장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안전망 부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노동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숙련된 고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_박지순 고려대 교수

“글로벌화,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소수집중, 빈번한 이동, 다수의 실업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니다. 고용보험 재편, 실업부조 확대 등 사회안전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_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4. 기업의 사회공공성 역할 강화





현장의 목소리

“기업과 가게간 소득불균형은 계속됩니다.”

“국민소득 중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은 점점 커지는데 가게 몫은 줄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통해 가게로 이전해야 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활발합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에 이릅니다.” _시민단체

“기업이 의도적으로 돈을 쌓은 게 아니라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가진 자들이 돈을 쌓아놓는다’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_대기업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라는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너리스크 여전합니다. 국민 눈에는 기업관행을 개선한다는게 진정성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반기업정서는 기업들이 자초한 면이 큼니다.” _대기업 직원

“직장인들이 전근대적인 업무방식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업이라는 존재가 우리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터전인데, 야근, 상명하복, 자기 희생... 이런 단어로 표현 되잖아요.” _중소기업 직원

“‘사회공공성’과 ‘시장자율성’ 간 저울의 방향은?”

“밀려있는 사회부문 숙제를 한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지만, 내 사업은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_대기업 임원

“과거보다 기업의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지 않을까요?” _시민단체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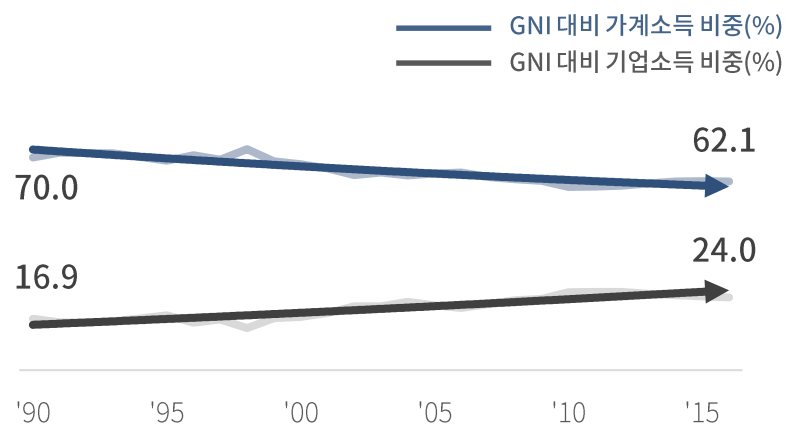
기업의 저축률은 커져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가계와 기업으로 분리해 보면,
기업의 비중은 지난 25년간 17%에서 24%까지 늘었지만,
가계의 몫은 70%에서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비율도 25년간 1.6배 늘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풀지 않는다는 인식도 불신을 키웁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도 늘어나지만,
투자가 과거만큼 활발하지 못한 채 현금성 자산만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8년간 350.8%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표면상으로 투자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투자의 기회를 만들 근원적 경쟁력이 줄었기 때문이며,
규제로 인해 투자의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소득계정 중 가계·기업비중 변화('90-'16)



자료: 한국은행

국민들의 29%만 한국기업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에델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9%만이 기업을 신뢰하며,
‘CEO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WEF는 ‘한국기업의 경영윤리는 세계 137개국 중 90위,
주주 보호 99위, 이사회 유효성 109위’라고 분석합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 규제만 늘어갑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중
규제법안 비율(66%)이 지원법안 비율(34%)의 2배입니다(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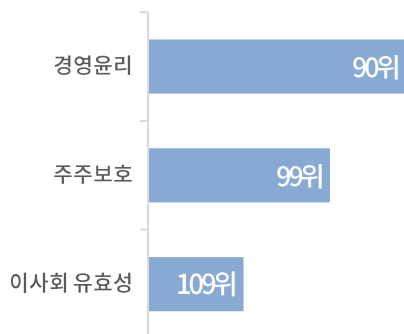
한국기업의 조직 건강도 글로벌 하위 25%입니다.

직장인의 야근 횟수는 주 5일 중 평균 2.3일입니다.
여기에 상명하복의 기업문화, 전근대적 인사제도, 저조한 여성인력 활용도,
그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무관심이 그 원인입니다.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야근문화, 회의문화부터 하나하나씩 바꾸고
있지만 기업전반의 풍토는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관행의 현주소

총 137개국



사회공공성 요구 논의



자료: WEF



전문가 진단

“선언적 변화 아닌 실질적 변화를 실천할 때입니다.”

“반기업정서를 완화시키려면 기업도 시장과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법보다 높은 자율규범의 울타리를 만들어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_고위공무원

“기업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좀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_박상인 서울대 교수

“낡은 기업문화를 뜯어 고쳐야 혁신과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반기업정서의 상당부분은 기업문화의 낙후성과 그로 인해 내부 직원들이 겪는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CEO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차원의 기업문화 개선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구시대적 기업문화의 3대 근인인 (1)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 (2)비합리적 평가보상시스템, (3)리더십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_컨설팅 업체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의 상생이 요구됩니다.”

“(1)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잃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2)기업도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분배를 해 왔는지 되돌아 보면서 기업친화적인 문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_홍석철 서울대 교수